

第268回國會
(臨時會·閉會中)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8月10日(金)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

審査된案件

1.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 1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원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폐회중) 제8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웅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남북 당국이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우선 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북핵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현안을 진일보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정상회담의 의제가 확정되지 않아 준비접촉을 통해 공식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는, 각각각층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으며, 그 핵심적 내용은 북핵문제의 해결, 한 차원 높은 남북 관계의 진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본 틀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의 전기가 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정부 측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

(10시10분)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이재정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관련 정부 보고를 청취하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일 정부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과 그간의 과정을 소상하게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여러 정당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남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계기를 통해 위원 여러 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고 문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다는 인식 아래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개최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속하며 그 뜻을 천명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아래에서 우리 측은 장관급 회담 등 주요 남북 접촉 계기에 북측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온 바가 있습니다.

북측은 7월 29일 통전부장 명의로 국정원장의 방북을 공식 초청하였고, 국정원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8월 2일 방북하여 북측으로부터 중대 제안 형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제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북측은 정상회담 개최 제의 배경에 대하여 최근 남북 관계 및 주변 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수뇌부 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급을 전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의에 대하여 우리 측은 국정원장의 2차 방북을 8월 4일에 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한다는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5일 남북 양측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대하여 합의하고, 국정원장과 통전부장 명의로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8월 8일 제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건을 보고하

고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의 요지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과 남북 정상 상봉은 남북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하였으며, 정상회담 준비 접촉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합의 정신 구현 및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실천 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양 정상 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확대 발전과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경험 및 교류·협력을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고, 다음 정부에도 상생의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번 정상회담은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담 개최 관련 합의서에 대한 법적 발효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바로 대통령의 비준 공포 절차를

밎을 예정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며,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각 부처의 차관급들이 참여하는 준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통일부 차관을 처장으로 하는 사무처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남북 정상회담 과정을 조정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 8월 9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1차 회의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주부터 남북 간에 정상회담 준비 접촉을 개성에서 진행하고, 체류일정, 대표단의 규모, 경호·의전 등 절차 문제를 협의해 나가며, 통신·보도·의전·경호 등 분야별 실무 접촉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전에 선발대를 파견하여 행사현장 답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회성의 성과보다는 다음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의 제도화·정례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아래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원문을 첨부했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 체계를 별지로 첨부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 委員 김용갑 위원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의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장소도 이번에 서울인데 이것을 급히 평양으로 약속해 주는 등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리 포장해서 설명한다고 해도 졸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등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많은 공작을 해 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나라당 집권을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처지에서 대선에 북풍을 이용하려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공동으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합동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김정일은 이번 기회에 친북 좌파 성향인 노무현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경제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보장을 국정원장을 통해서 약속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회담을 할 때는 반드시 의제가 있어야 하는데 의제 없이 회담을 한다는 것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대선을 위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난 8일에 공식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발표를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추진위원회, 그리고 기획단, 사무처의 조직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의제를 연구하고, 이렇게 국회로부터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의제를 설정하고 이 의제를 가지고 북측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金容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의제를 다 설정한 다음에 그 의제를 풀기 위한 회담이지 이번처럼 그냥 회담을 열어 놓고 나중에 의제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주 촉박합니다. 한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제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동안에 여러 측면에서 남북 간의 과제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金容甲 委員**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리에게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아주 중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용한 회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容甲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벌써부터 이번 정상회담을 이벤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로로 간다, 철도로 간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을 남북 정상회담에만 모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바라는 것은 북핵 폐기를 위한 확실한 약속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성과를 자신 있게 이루어 낼지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다 하면서 그 대신에 핵을 개발했고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합의하지 못하고 단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면 이걸 사실상 구두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로서도 이번에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핵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이미 2·13합의 조치가 진행 중에 있고, 6자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에너지실무위원회도 열려서 쌍방간에 좋은 결론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容甲 委員** 그러면 국민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북핵 폐기를 이번에 확실한 약속을 보장받아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걸 받아 낼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한번 해 보는 정도로 지나가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는 이제까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역시 평화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이 평화 정착의 대전제는 역시

핵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그렇게 여러 번 천명해 왔고요, 이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염원이라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는 역시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容甲 委員**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의 설명을 보면 ‘이번에 뒷거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북한하고의 거래에 있어서, 회담이든 뭐든 간에 어떠한 경우든 뒷거래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현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야기됐던 북한의 철도·육로·항만 등 SOC 사업과,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송전·경제특구·개성공단 등 최소한도 말이지 200억불 정도…… 20조 정도는 지원 약속을 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은데, 이거 약속해 주고 온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참여정부는 이제까지 대북 관계에 있어서 투명하게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도 뒷거래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말씀처럼 200억불 약속 같은 그런 어떤 약속도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金容甲 委員**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약속을 했다’ 소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북한에 아무리 퍼 줘도 남는 장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엄청난 약속을 해 줬다고, 엄청난 퍼 주기를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는 약속만 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다음 정부가 이 많은 돈을, 엄청난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金容甲 委員** 이 정부가 실행하지 않을 거고 다음 정부가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과정과 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는 것처럼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 없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국민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 경우는 국회에 반드시

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한 방법이외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甲 委員**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전임 사장이 도장을 찍어 놓으면 다음 사장이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기 중에,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 온 것으로 봐서 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국회 동의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회답이 끝나고 나시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甲 委員** 그리고 이번에 회답을 투명하게 한다 하면서…… 투명하게 하려면 말이죠,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또 회답을 진행하고 있는 통일부장관이 해야지 왜 비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이가서 합니까? 그래서 이 회답 이면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장관이 하지 않고 국정원장이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투명하고 공식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지명한 특사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이행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만큼 투명한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관계를 다루는 주무 부처의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저희 통일·외교·안보 쪽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金容甲 委員** 국정원이라는 곳은 비밀을 보장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또 공작을 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번에도 투명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분명히 뒷거래가 있었다, 또 사전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배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선 위원** 저는 남북특위위원장으로서는 가만하면 의사진행발언 같은 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김용갑 위원께서 방금 질의 도중에 이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이나 또 지금 이 시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그리고 기대에 비춰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시정을 요구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상임위는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준비할 건지, 또 이게 어떻게 잘 성과를 이룰 건지를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협력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께서 노무현 정부가 ‘친북 좌파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라고 지금 규정을 하시는가 하면 특히 이번 회답을 하면서 2조 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金容甲 委員** 20조 원……

○**배기선 위원** 20조 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뒷거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근거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金容甲 委員** 뒷거래가 아니고 그렇게 약속했을 것이다……

○**배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민족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을 훼손시키고, 완전히 유언비어를 이렇게 유포하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번 정상회담이 시기도 잘못되고, 의제도 없고, 장소도 잘못되고, 대통령 선거에 대선적 관점에서 이거 완전히 이벤트다 이렇게 완전히 폄하하시면서 규정을 하시는데, 김용갑 위원님이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에 이게 크게 굉장히 불이익이 될까 봐, 민족사에 중요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경제협력, 그리고 전쟁을 방지하고, 정말로 민족 평화와 번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꿈과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이런 정략적이고 대선적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사에, 민족사에 중요한 이런 정상회담을 파괴하고 처음부터 이걸 방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일 뿐이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확인하시고,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서는 정말로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됐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金容甲 委員** 다 했어요?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원웅** 김용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容甲 委員** 존경하는 우리 배기선 위원이 아주, 최근에 보지 못할 정도로 격앙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장관이 하나하나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이 답변했는데,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질의에 대해서 배기선 위원이 잘못됐다,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너무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국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담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 요지는 북핵문제를 과연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의제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정원장이라는 분이 북한하고 비밀리 접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그러면 아무 보장 없이, 아무것도 줄 것도 없이 그냥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승낙했겠느냐 이거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충분한 경제 지원, 지금까지 거론된 것을 다 약속할 수 있다는 정도로까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기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하나의 항의 정도로 보면 끝날 수는 있지만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배기선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추가로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배기선 위원**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께서 방금 해명하시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정상회담이 된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면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외에 천문학적인 20조 원의 뒷거래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남북 간에는 뒷거래가 없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박근혜 대표께서 평양 가실 때도 뒷거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최근에 평화비전을 발표하시면서도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근거 없이, 함부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민족사에 큰 누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핵문제 같은 문제가 정말로 잘 되도록 한다면 그런 충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근거 없이 국민들한테 크게 오해를 살 수 있는, 20조 원의 뒷거래니 이런 얘기는 지금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만약 나가 버리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또 불신하고 오해를 사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용갑 위원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金容甲 委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재경부가 지난번에 남북 지원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면 60조 원쯤 됩니다. 60조 원쯤 되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최소한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오고간 이야기, 이 정도는 국정원장이 북한에 가서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회담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우리 통일부에서 한 보고에도 보면 이번에 남북 교류와 남북 지원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겠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선 진행을 좀 시키고…… 지금 두 분이 여러 가지 말

이 오갔는데 미진한 게 있겠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죠. 다음에 최성 위원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간사로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아니, 최성 위원 발언하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얘기하자고.

○**최성 위원** 원래는 정책질의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지만 할 수 없이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유력한 대선후보는 고민 끝에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오늘 김용갑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뒷거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 계셨기 때문에 당시의 그 기관이 갖는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DJ정부·참여정부 이후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뒷거래가 있으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원내 제1당으로서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운 대북 정책이라고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겠다, 또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첫 번째 질의자의 질문이 '친북 좌파' '2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소속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의 좋은 패에 불리할까 봐 지지한다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후에,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김용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근거 없는 말씀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코 국익에도 도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절차에서 투명하게 진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정말 국익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이번 정상회담

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동일 선상에서, 역시 안기부에 오랫동안 계셨던 정형근 의원이 얼마 전에 참으로 충격적인, 햇볕정책보다도 더 햇볕정책적인 새로운 대북정책을 한나라당이 표방을 해서 아, 이제 드디어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수용했구나라고 믿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형근 의원의 평가, "정치적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략적인 대선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코 지지할 수 없다." 이러한, 또 실제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100억 달러 미만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을 것이다."…… 사실입니까? 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이 이렇게 성사가 되게 된 것은 2·13합의 조치의 이행 국면에 접어들어서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 6자회담의 진전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단계라고 판단을 해서 양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회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일에 전혀 법률적으로나 또는 준비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한나라당의 행태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참여정부는 같이 같은 수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냉전의 시계를 평화의 시계로 바꾸는 과정에 한나라당의 동행을 권한다는 충고를 했는데 저 역시 한나라당이 색깔론에 기초한, 냉전 시대의 허상을 깨기 위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얼마나 역사적인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초당적인 방북단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방북 대표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자문해 주실 것을 정말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최성 위원**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국중당 모두 한결같이 남북 교류·협력 정책을 지지하고 또 이번 정상

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일각에서 시간만 끌면 어떻게 집권해 볼까 하는 이러한 발상을 깨기 위해서라도 초당적인 협력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 있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직접 초청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는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확정 발표를 하면서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각 당의 원내대표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국회에 물론 통외통위원회를 비롯해서……

○**최성 위원** 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유력 대선 후보 또 정당 대표들을 불러서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과 초당적인 협력을 적절한 시기에 구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좋습니다.

저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 접촉대표단의 일원으로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시의성을 감안할 때 실무 접촉단에 맡겨서 대단히 중요한 현안을 감당하기는 시간적으로 대단히 촉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관이 직접 나서시더라도 대통령의 특사로서 방북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포괄적이고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의제에 대한 협의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앞으로 정상회담 열리기 전까지 남북 간에 협의의 과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다른 특사가 이 의제 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의제에 대한 것은 회담 이전에 남북 간에 최대한 합의를 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경의선을 통한 육로 방북의 현실적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장관이 보실 때 경의선을 통한 육로를 통해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접 갈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존재합

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남북회담을 할 때 육로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외국 대표들의 경우에 육로를 이용해서 왕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직 준비 접촉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디만, 개성에서 열리게 될 준비 접촉이 되면 그때 통행에 대한 방안으로 육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급하게 지금 이것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정상회담은 모든 정상회담이 정상의 개인적인 스타일 또 어떤 정치적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직설적이고 화끈한 성격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표방하는 광폭정치가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히 결단 어린 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상회담은 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성급하게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합의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저희가 내다보는 것은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와 앞으로의 전망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4개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둔 반면에 미국 정부는 당장은 어렵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4개국 정상회담이 가능한 조건,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북 간의 대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틀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한나라당에서 모 의원이 10월 말 김정일 제주 답방설이라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특정 정보를 언급했는데 10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제주도에서 답방한다는 이 첩보가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전혀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이 7년 만에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정확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적절치 않다

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마무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6자회담 틀 안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해야 된다, 6자회담 틀 안에서. 6자회담의 틀 안은 무엇이고 밖은 무엇입니까? 이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6자회담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6자회담이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그 가치의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자가 지향하는 목표와 남북 대화가 지향하는 목표가 역시 같은 선상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서 역시 6자회담과 남북 관계는 선순환적, 병행 발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갑 위원님 서두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열려서 왜 차기 정부가 그것을 할 텐데 전임 정부가, 임기를 다 끝낸 정부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지만 현재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외교·안보 현안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제1당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또는 박근혜 후보가 어떤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갖느냐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내는데 관련이라고 보는데 저는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가 좀 더 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참으로 듣기 거북할 정도의 비난과 매도를 하면서 당사자인 두 후보는 '정상회담 지지한다.' 그것이야말로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략적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장관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초당적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그리고 참여정부가 정략적으로 정상회담을 이용할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있는 모든 정당의 초당적 참여에 대해서 장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위원 그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시고 추진해 오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2000년 정상회담은 분단 55년의 아주 큰 장벽을 뚫은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루어지는 제2차 정상회담은 분단을 넘어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민족사적 전기를 만드는 회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남북 간의 평화의 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주로 의제로 다루어질 텐데 8월 28일, 29일, 30일 다루어진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이 이어서 APEC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나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또 아베 일본 총리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바로 이어서 열흘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4일 날은 유엔 총회에서 또 많은 정상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9월 중순까지는 국제 외교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문제가 계속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국제적 논의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상회담이 아주 성과 있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성과를 더 진전시키는 모멘텀도 될 수 있고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쟁 당사국들 간의 4자 외무장관 혹은 정상들 간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현재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준비들을 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평화체제와 경제 교류·협력은 서로 간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3월에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해 봐도 역시 개성공단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하고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포라든가 원산이라든가 나진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역외가공공단을 더 많이 만들자라는 요청을 저도

받은 바가 있고 또 백두산이나 구월산이나 묘향산, 개마고원 이런 쪽에도 관광을 많이 개방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쪽에 있는 많은 광물자원 그리고 노동력…… 지금 노동력이 우리 임금의 한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이 사회보장비까지 합쳐도 75불 정도니까 한 달에 7만 원꼴인데 우리가 일당이 하루 7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임금이지만 노동의 질로 보면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노동자들보다는 훨씬 질이 좋은 노동력 그리고 광물자원 이런 요소와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면 정말로 제가 보기에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한민족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모든 우리의 시각이 남쪽에만 묶여 있는 분단시대의 시각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시각으로 더 크게 발전해야 되고 통일부의 정책도 그런 시각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협에서도 다루어지고 장성급 회담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한강 임진강 하구에 평화수역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쌓여 있는 토사, 모래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아주 양질의 좋은 건자재를 확보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북쪽에 많은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를 개통할 수 있는,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실제로 100억 불, 200억 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북쪽은 토지가 전부 국유화가 되어 있고 인건비가 3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닦는 비용이 남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남쪽은 고속도로 1km를 닦는 데 보통 5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북쪽은 토지비용이 하나도 없고 인건비도 아주 싸고 건자재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개성하고 평양 사이 한 140km 놓는 것을 협의해 보니까 순수하게 들어가는 자재비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도로공사 쪽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불과 한 3000억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100억 불이니 200억 불이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속도로, SOC 닦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200억 불,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가져야

닦는다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쪽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하고 수교할 때 수교에 따르는 식민지 배상금으로 오갔던 금액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경제 교류하면서 뒷거래로 100억 불, 200억 불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고, 상호간에 광물자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 서로 간에 거래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런 불필요한, 일종의 음해인데 거기에 너무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경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여러 가지 토목·건설업체들도 굉장히 좋은 새로운 북한 특수를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동남아나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도 그런 역외 가공,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새로운 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구에 갔더니 대구의 섬유업체들은 빨리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완공돼서 자기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아주 절박한 요청을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은 정상회담 이후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 행방불명이 돼서 알 수 없게 된 분들, 저는 그것을 약칭 ‘전불자’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더 진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임진강 하구 모래 채취, 이용하는 것은 이미 경협에서 많이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군사적 안전보장만 이루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군비통제에 관한 협의를 중요해서 군비통제에서 지상군 감축이라든가 국방비 감축이라든가 재래식 무기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결국은 정상회담의 성과가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보다 긴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2000년도에 특별수행원으로 가 가지고 북쪽에 있는 군부 요인들하고 테이블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가서 나누는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돌아오셔서 여기 인터뷰라든가 언론에서 하는 발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도에는 그 발언이 절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갔다 와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현지에 가서 또 돌아와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북단 구성도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그냥 장관님 답변만 간략하게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주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 회담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사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가능한 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사실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부도 노력했지만 여러 분들의 북측과의 여러 통로를 통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남북 간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특히 국회와의 긴밀한 연락·연관 아래 남북 정상회담 전후의 회담의 성과를 가지고 한 단계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회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정상회담 발표가 나왔을 때도 바로 찬성한다, 환영한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권에 계시는 분들이 한나라당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코멘트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그런 행태를 보이셨던 부분에 대한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자리인데 한나라당에 대해서 아주 심한 비판을 죽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 정상회담이 특별히 정치적인 의미,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제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최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권에서, 지금 열린우리당이신가요?

○**최성 위원** 당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권영세 위원** 당에서 가장 파티 라인을 잘 따르시는 분인데 한나라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거리를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한나라당 위원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정상회담하고 관련해서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관님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DJ 정부 때 정상회담을 하면서 저 개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설마 뒷돈이 오갔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안 그러리라 생각을 했던 DJ 정부에서 사실 뒷돈이 오간 부분이 나중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 정부하에서? 그 자체로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정도는 최소한 나오고 의문 정도는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서로 비방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우선 용어부터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앞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나오다가 뒤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조금 아까 보니까 장관님도 그 부분을 갖다가, 어찌다 나온 말이 아니라, 즐겨 쓰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 하면 한반도가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니깐 남쪽에도 핵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남과 북을 싸잡아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표현

하거나 쓰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현재 현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것이,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북핵문제가 논의되는 것이고 이 북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지……

○**권영세 위원** 지금 굳이 포괄적인…… 우리가 우리 한반도에서는 일방적으로 핵문제,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모든 핵 시설을 다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실현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만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렇다면 굳이 대외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계속해서 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제까지 그냥 보편적으로 쓰여 온 용어이기 때문에……

○**권영세 위원** 물론 의도적인 것은 없겠지만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7월 29일 날 그쪽 통전부 쪽에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정상회담을 의제로 두고 접촉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마른 하늘에 그쪽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비로소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동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과정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고요, 북측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7월 초에 국정원장이 북측의 통전부장을 만나서……

○**권영세 위원** 7월 초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남북 간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했고요, 이에 따라서 7월 29일 날 국정원장을 북의 통전부장이 초청을 해서 이때 만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에 따르면 7월 29일 날 북한의 통전부장이 갑자기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국정원장이 7월 초에 남북문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 간접적인 제안을 한 것이지요.

○**권영세 위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쨌든 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른 대답의 형식으로 7월 29일 날 북한의 통전부장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네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당시에, 7월 초에 제안했을 때 의제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였습니까? 통전부장이 어떤 문제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특정한 어떤 의제를 설정해서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 당시 이야기한 것은 역시 한반도의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했고요.

○**권영세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지금 추진 주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왜 스파이 기관인 국정원장이 그것을 했느냐? 제가 여태까지 이해하기로는 7월 29일 날 통전부장이 우리 국정원장을 만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7월 초에 우리 국정원장이 통전부장에 대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대답으로서 이렇게 온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왜 국정원장이 하고 통일부장관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저희 내……

○**권영세 위원**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은 통일부장관께서 리드를 잡아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뭐 꼭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사실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요, 이런 협의 과정에서 북측의 통일전선부장이 초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국정원장이 가게 된 것은 대통령의 특사로서 간 것이지 꼭 국정원장 자격만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누가 가서 해도, 남북 관계를 잘 진전시키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누가 하든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통일부장관이라는 게 뭐 부서까지 있으니까 자연

스러운 게 아니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내부적으로 논의와 협의는 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8월 5일 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날짜가 8월 28일에서 30일이면 그 준비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지난번의 1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4월에 대체로 합의가 돼 가지고 6월 15일 날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준비 기간이 그래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불과 한 3주,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잡은 이유는 뭐니까? 9월 정도로 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7년 전의 경우는 처음 열리는 것이었고요, 남북 간에 충분한 그런 대화가 성숙돼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남북 당국 간 대화만 해도 200회가 넘는 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스물세 차례 정도의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합니다.

또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의 유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저희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충분한 준비는 돼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권영세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의제 선정도 아직 안 돼 있어서 의제 선정 절차도 남아 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민족사적 전기를 만드는 회담이어야 된다,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거나 이런 식의 포장을 해서는 오히려 많은 실감만 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권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민족사적 전기를 만들 정도의 회담이라면 그게 20일 만에 준비가 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결국 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 민족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족사적 전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라고 제가 그렇게……

○**권영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받아서 하실 때 장관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데 장관님이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준비기

획단 단장으로서 보고까지 하는 자리에 무슨 다른 외부 행사를 참석하느라고 그 자리에도 참석을 안 하셨던데 그 얘기는 뭐니까? 설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지금 통일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통일부가 기획단을 책임을 지고 사무처를 주장하면서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렇게 중요한 입장이라면 다른 외부 회의를 취소하고라도 안보정책조정회의 같은 데는 장관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보고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전에 내부적으로 그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됐고요, 내용이 다 공감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권영세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사전에 다 설명이 되는 것이고 실제 회의는 대체로 꺾테기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나갔던 것도요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자문과 의견들을 듣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별개의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이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감을 얻어서 진행했던 일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슨 회의에 가서 기조강연 하시는 게 무슨 자문 듣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 국정원도 동원이 되고 국방부도 동원이 되고 모든 부서가 다 동원이 돼야 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은 이런 남북문제에 있어서 리드를 잡는 것은 사실은 스파이 기관이라기보다는 통일부에서 잡아야 되는데 통일부장관이라는 분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거나 이런 식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고 또 실제로도 앞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리드를 잡아 나가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에는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한나라당 박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남북한이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을 평가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과정 또 논의사항 이것을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제 설정도 투명하게 추진을 해서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올바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이렇게 조금하게 추진하는 정상회담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가, 또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또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으로서 아마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의제가 제대로 설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서 보시기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어떤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역시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평화 정착이라는 문제를 내걸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제에 대한 협의와 설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현재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역시 6자회담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고요……

○박진 위원 북한의 핵 폐기 문제……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이외에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박진 위원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핵 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지요.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비핵화가 되어야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평화체제나 또는 평화협정에 관한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중요 의제로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 폐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지금 6자회담에서 이미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2·13합의 조치가 이행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6자라는 다자간의 책임 틀 안에서 이 문제가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것을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 폐기 그 자체보다도 핵 폐기 이후의 한반도의 미래, 핵 폐기 이후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남북 간에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핵 폐기에 관한 중요한 과정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진 위원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입장은 너무나 낙관적이고 또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대단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 북한이 6자회담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가 더 있지만? 또 북한 핵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평화 문제이기 때문에 모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6자회담에 맡기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원하면서 남북 간에 물론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핵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역시 핵 폐기 이후에 있을 어떤 남북 간의 전망, 한반도의 전망을 나누는 것이 양 정상 간에 필요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박진 위원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중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또 그다음에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측이 의제 설정 과정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조정하는 문제 또 국가보안법 폐지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이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아직, 지금 회담이 준비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남북 간의 이해와 남북 간의 그동안의 논의 과정들을 기본으로 해서 남북 간의 발전, 평화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 위원** 또 지금 을지포커스 훈련,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죠. 이것이 같은 시기에 실시가 되는데 북한에서 이것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정확한 어떤 의사 표시나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준비 단계에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만일 제의해 온다면 그때 저희가 적절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또 우리의 안보를 위한 이런 훈련은 훈련대로, 이것은 별개로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역시 한반도 전체에 관한 문제를 양 정상 간에 7년 만에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이 문제는 북측에서도 공식 제의한 바가 없고요, 또 이것은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의제가 있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고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인도적 문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정상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역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과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 위원** 두 번째로 북한의 실질적인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경협과 지원은 과거의 일방적인 햇볕정책에 의한 지원 방식이 아니고 북한의 실질적인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자유와 인권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북한의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그런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고 또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야만 국민이 경협이나 또는 대북 지원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정상회담이 아시는 바와 같이 7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번 회담을 아주 차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이번 회담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남으로써 남북회담, 정상회담의 정례화 또는 제도화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고, 만나서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제와 내용들은 정상 간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이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남북의 평화 관계에 좀 더 발전적인 제도화 또는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박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절차의 투명성과 합법성이 보장되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뒷거래나 이면합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진행 과정과 논의 내용 일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 준비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조건이 있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준비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노력해 왔고요, 지금까지 전혀 벗어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위원** 우리 국회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구속하는 이러한 합의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이 다루어야 할 사항은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면 국민에게 어떤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경우의 그런 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자체로서만……

○**박진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진 위원**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동의합니다.

○**박진 위원**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투명하고 차별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국내 정치나 또는 대선 국면에서 이러한 정상회담을 만약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정치적 정략적 이벤트성 회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인도적 문제의 진전, 이러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알맹이가 있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축구를 합니다. 장관께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부는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전혀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권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 국가 이익과 국민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해 드립니다.

국민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만 하더라도 처음 국민 여론 조사에서 80% 이상의 지지가 나온 것을 보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은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저희들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21세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어떻게 정착되고 남북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발전될 것인가 하는 데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것이 임기 초가 되었던 말이 되었던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이 중요한 시기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정치권에서도 다 같이 협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가장 책임 있고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서의 차이가 너무 큰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진보라고 하는 그쪽에서도

극히 소수입니다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극단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 남북문제에 있어서 또 보수라고 하는 쪽의 극히 일부지만, 일부도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상당수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권 단독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러한 점에서 남북 양 체제 간에 정치인 간의 좀 더 밀접한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측 대표들이 우리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제가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북측은 최고 지도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남측의 경우에는 남북의 협력에 있어서도 국회가 여기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되는 데 결정적인 지장을 받기 때문에 견해 차이를 가진 모든 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유일한 기구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의 정치 지도자들과 남측의 각 정파가 대화의 기회를 갖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남북 관계, 남북 협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들이 만나는데 이러한 기회도 활용이 돼서 국회 간의 접촉,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의제의 설정, 이것이 대단히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은 그 점에 대해서 이해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제에 있어서 국회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정책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야로 보기 때문에 남측의 국회라고 하는 곳이 남북의 협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는 못합니다마는,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대화가 오

고 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들이 만나는 그 기회에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께서 남북 국회 간에, 정치인 간에 일상적인 교류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의제도 그런 설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김영삼 정권 때 그때 남북 관계가 지금과는 대단히 천양지차의 상황에 있을 때도 국회 회담이 거의 이루어지는 직전까지 갔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국회 회담이 상당히 성사 직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남북 정상들이 만나는 기회에 그 틀을 만들었을 때 생각이 전혀 다른, 남북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한 그러한 정파나 그러한 정치 집단도 북과 좀 더 밀접한 대화의 기회를 시스템을 통해서 갖는 것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 남북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그 어떤 접촉보다도 국회 간의 그런 접촉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 간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남북의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틀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의제로 선정이 되어서 논의돼서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원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원기 위원** 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선 위원** 7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온 국민이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지지와 바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민족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서 제가 약간의 이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만 여기서 우리가 경제협력과 뒷거래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이번 정상회담은 어떻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 간의 결단의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주변에 새로운 신냉전의 여러 가지 조짐들이 드러나고 있는 판에 다행히 우리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바라기로는 지금 현 상황이야말로 특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적대시 정책을 이제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한반도 평화를 잘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한 이즈음에, 바로 이때에 또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를 분명하게 빨리 가닥을 잡고 또 빨리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6자회담도 잘 진행이 되고 남북 간에도 신뢰를 구축해서 동시에 잘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국민과 민족의 바람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해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나 외국의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적절한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번에 북측의 외교적인 그런 성공 또 남측의 외교적인 쾌거,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평화 문제와 여러 가지 경협 문제 또 민족 내부 문제 이런 것을 잘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통일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의 고언을 잘 반영해서 정말 이번에 반드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또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서 논의를

하시면 굉장히 허심탄회한 논의를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앞으로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분단 고착적인 평화체제나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준비하시는 통일부에서 유념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 지지와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전이나 또는 회담 이후나 간에 하여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민적인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어느 특정 정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으로만 과시하실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성과와 진행 과정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어서…… 저는 이번에 오늘 제1당인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도 대체로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특히 핵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수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문제를 비롯한 평화체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역시 한반도 주변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민족 내부의 문제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게 필요하다, 말하자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흔들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또는 강대국들의 국익에 의해서 한반도 정세가 흔들리거나 우리의 국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우리가 남북 간에 안정적으로 이것을 우리 민족끼리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전략적 뼈대를 이번 기회에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거기에 양쪽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아까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남북자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분단 시대에 피눈물 나는 그런 가슴에 맺힌 사연들을 다 풀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의제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님께 지금 여쭙어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북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북·미 간에 뭐가 잘 되면 남북 간에는 소홀해진다, 소위 북쪽이 전통적으로 추진해 왔던 통미봉남 정책이 다시 살아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시점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공고화, 남북 관계가 좀 더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하고 북·미 관계를 비롯한 6자회담에서 국제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은 정말 참으로 균형 있게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저는 6자회담이 잘 진행되는 속도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되, 가능하면 적어도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그것을 주도해 나가고 전략적인 비전과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 나가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세계 앞에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이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0일 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배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과 최성 위원께서 마치 한나라당은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를 하고 한나라당은 반통일적인 수구 세력이고 반평화적인 세력 같은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의 자리가 사실상 정상회담의 앞으로의 전망과 의제 설정이라든가 효과적인 회담 성과 등을 기대하는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무슨 오해가 있으시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누구나 회담 자체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

를 제기한다거나 또는 반대하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기라든가 또는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어젠다도 아무런 결정됨이 없이 조금하게 회담 일정이 잡히는 데서 오는 회담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데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8일 청와대 기자회견 석상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 비공개 채널도 있다, 정상회담 추진을 해 나감에 있어 공개·비공개 채널이 다 활용이 됐으나 아주 투명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모순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 비공개 채널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대통령이 주장한 ‘투명한 남북 관계’와는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 관계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필연적으로 공개된 대화의 채널도 있지만 비공개된 대화의 채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비공개라는 것이 일종의 비공개이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든가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런 면에서 정부는 투명하게 일을 해 왔고 모든 것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추진해 왔고 설혹 비공개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 앞에 바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 남북 관계의 공개적 채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아까 어느 위원의 지적이 있으셨지만 남북 관계를 전담하는 부서가 통일부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정상회담도 당연히 통일부가 주도가 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정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안기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활약하던 70년대와는 정부 내에서의 위치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통일부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오가면서 이러한 회담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볼 때에는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점은 대통령께서 판단 하셔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특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내부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추진에서는 특별한 지장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흥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국정원장이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상황에 따라서는 국정원장도 갈 수 있을 것이고 통일부장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절차와 정부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통령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번의 경우는 특별히 북측에서 국정원장을 지정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고흥길 위원** 아까 답변하셨을 때에는 국정원장이 북측에 전달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7월 초에 먼저. 그래서 국정원장을 초청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국정원장을 특별히 지정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이.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때에 우리 측에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현안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을 국정원장이 북측의 통일전선부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통일전선부장이……

○**고흥길 위원**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무슨,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이라든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단가 이러한 점도 물론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1월 3일 대국민 신년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그 전에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수차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남북회담이 현시점에서 열리는 것은 6자회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생각해서 열린다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상 현 상황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아직도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실한 로드맵이 결정된 바가 없고 또 6자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북핵 불능화까지의 절차,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한국의 독단적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 정상회담은 그 시기에 있어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측에서 남북 관계 및 주변 정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 북측에서는 이 시점이 정상회담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 쪽에 요청해 왔고요, 우리 판단도 역시 2·13합의 조치가 지금 이행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하게 잘 이행되고 그 이후의 남북 간의 비전까지도 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고흥길 위원** 그런데 외교적 관례로 볼 때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젠다도 설정이 안 된 상황, 특히 20일 앞으로 다가온 회담을 이렇게 발표하는 예가 아주 극히 이례적입니다.

남북 간의 현안이라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축 누적돼 왔던 이러한 현안들이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 정부가 남북회담을 그저 하는 것 자체, 남북회담의 성사 자체에만 뜻을 두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평양 방문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서를 보면 ‘민족끼리 정신’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들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고흥길 위원** 이번 합의문서에……

그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으로” 운운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족끼리 정신’이라는 게 자칫하면 제3국에 대해서 외세를 배제한다는, 특히 북한이 계속 미국을 제외하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뉘앙스가 매우 강하게 풍기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일부 국민들이나 주변국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 뜻이 뭔지 장관이 좀 밝혀주시기 바

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 참여정부에서는 그동안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공존공영을 주장해 왔고요, 이것은 역시 당사자 간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 용어는 사실상 지난 6·15 공동선언을 비롯해서 남북회담의 합의문이나 혹은 남북회담의 여러 가지 문서에 끊임없이 나오던 그런 아주 보편적 용어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민족 공조 또는 민족의 공존공영 이런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남북 당사자 간의 협의와 남북 당사자 간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고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저는 지난 3월에 2·13합의의 초기 조치가 이행되는 전제로 김정일 정권에게 핵을 포기하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 첫 단계인 5개 핵 시설 폐쇄 단계까지 왔고요,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 그리고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등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물질을 성실히 신고하고 국제 사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생존 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대단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외교적 해결이라는 기차에 지금 올라타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관련국들이 나름대로의 창의적 역할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테마는 역시 북핵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또 핵문제 해결의 고삐를 당기는 노력 이런 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한나라당도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비전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남경필 위원**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방향이 바뀌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방향의 물꼬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약간의 논란이 있고 그것과 다른 의견이 개진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마치 한나라당이 전체적으로 냉전적 방향에 사로잡혀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것도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여권의 의원님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청취하고 이러한 국민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많이 의견이 개진됐습니다만, 특별한 의제도 없이 합의가 됐다는 점, 또 그동안 부인으로 일관해 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개최가 합의된 점 등…… 그동안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 등, 또 평양에서 개최하는 등 이런 점 등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끔 하는 요인들이 있음을 분명히 정부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정권적 차원의 이벤트로 봐서는 안 되고 좀 더 큰 틀의 남북 평화공존 기반사업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게 몇 가지 촉구를 한다면,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국내 정치적인 목적과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의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을 떨쳐 줄 수 있는 분명한 투명성을 가져 줘야 될 겁니다.

한편으로 두 번째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거고요,

저는 의제 선정에 있어서도 초당적 제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회답에서 그냥 단순한 핵 포기 의지 표명 정도를 넘어서 핵 시설 불능화의 구체적 방안이나 핵 폐기의 구체적인 시한 등에 대해서 북측에 요구할 의지가 정부에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2·13합의 조치의 2단계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끝난 6자의 에너지 실무위원회에서도 이미 남은 95만t 중유에 대한 공급 계획에 대해서 상호 의견들을 나눴고요, 이런 과정속에서 저는 2단계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남경필 위원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시한 등을 우리가 제시하거나 요구할 의지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러한 과정의 지금 6자의 진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은 아마 서로 협력하는 대화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저는 완전한 해결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란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진전 없이 다른 정치·군사적 현안을 제대로 진전시키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역시 핵문제의 해결과 여러 가지 군사적 관계 혹은 안보 관계 이것은 모두 연결돼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목표임에는 분명하지만 핵문제 이후에 남북 간의 평화적인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비전의 공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안을 진전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른바 비대칭 무기인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도 역시 북핵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아주 결정적인 과제라고 하는 데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남경필 위원 결국 비핵화가 우선이고 그다음 이 군비통제, 그다음에 남북 평화 선언이나 남·북·미·중 4자회담 같은 평화체제 논의는 이후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전협정을 종언하는 종전선언 같은 것은 중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는 남북 간에만이 아니라 관련국들, 주변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남북 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인,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합의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의제에 설정될 수 있는가가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의제에 따라서 결정될 일입니다만, 너무 성급한 예견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위원 분명한 것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들, 특히 한미동맹의 튼튼한, 공고한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데 공감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저는 공감합니다.

○남경필 위원 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NLL 재논의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북측에서 요구하고 나올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누차 남북 간 만남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남북 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 구축은 역시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기초 위에서 이번에도 대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면 NLL의 재논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러 가지 다원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국민적 공감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와 관련해서는 핵 폐기 약속이라는 북한의 레토릭(rhetoric)만 가지고 이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물론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핵 폐기가 현실화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평화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현 단계에서 현 단계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좋습니다.

92년 체결되고 바로 사문화돼 버린 남북기본합의서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NLL 합의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군사적인, 핵 폐기의 구체적인 단계가 있을 때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가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기본합의서에 보면 그 외에 철도 연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군사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자고 북측에 제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실 지금 상황이 저는 과거의 냉전시대나 혹은 대결시대를 넘어서 교류·협력 시대를 거쳐 왔고, 이제는 그 위에 화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개성공단의 발전이나 금강산 발전, 지금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차원의 어떤 진전, 이번 2차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제까지 우리가 남북 관계를 해 왔던 모든 관계들을 또 새로운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육로 방문에 이미 합의가 됐다라는, 대통령의 육로 방문이 합의가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저는 합의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는 실무 접촉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육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의할 계획입니다.

○**남경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남경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특히 갈등과 불신 속에서 쪽 지내왔던 남북 관계에서 정상회담만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특히 북핵문제가 불거져 있는 이 시점에 정상회담이 만나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고 또 그만큼 국민적 기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상회담이 국민적 기대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또 그만큼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되는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절차의 문제점도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가벼운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합의서 다 보셨지요, 합의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오늘 보고서에 첨부돼 있고 또 신문에도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전에도 이런 구절을 항상 봤는데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합의서라는 게 다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거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대통령도 행사하는 겁니다. 전제 군주 시대에나 가능한 용어인데,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상부’가 국민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이 용어 자체가 이미 전제 군주 국가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 “남북 정상 분들의”…… 존칭을 쓰는 이런 기본합의서 문서가 어디 있어요, 국제관례로 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북한의 변화와 개혁 또 민주화를 이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의서 형식조차 이렇게 전제군주에서나 가능한 것을 우리가 설득 못 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까?

이 합의서는 형식에 있어서는 헌법에 맞지도 않고 남북 관계 발전 법률에 맞지도 않아요. 남

북합의서가 어떻게 정의돼 있습니까, 이 법에 보면? 장관님 많이 보셨지요, 그 법률? ‘남북합의서가 뭐다’ 이렇게 법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정부하고 북한 당국 간에 체결한 합의서이지요, 이게. 이게 상부 뜻을 받들어서 체결한 합의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조차 북한의 뜻에 따라잡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남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관계입니다. 결국 남북의 관계가 일상적인, 보편적인 관계의 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이,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고 쓴 것은 역시 양측 정상 위임과 뜻을…… 위임을 받아서 특사의 자격으로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조금 어색함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념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위원** 아니, 개념을 제가 착각해서 개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에 있어서 이미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밖에 나가서 합의서를 만들건 약속을 하건 간에 그거는 다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대리하는 거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상부 속에 국민과 대통령이 다 들어 있다고 해석하시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진영 위원** 그렇게 둘러 붙이지 마시고요, 시정하세요, 다음부터. 이런…… 형식부터 자꾸 북한의 체제나 북한의 의도에 동의되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겠어요,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하셔야지. 이게 보면 민주국가 같지를 않아요, 우리가. 북한과 자꾸 동의화돼 가는 것 같지요.

이것은 어떤 우리 일반적인 관례…… 합의서도 법안이에요. 이 법률을 보면 이게 체결·비준되면 다 남북합의서는 국내법과 똑같다고요, 지금. 발전법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다 봤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국내법에 어떻게 ‘정상 분들의’, 존칭을 쓰는 게 있으며 말이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하세요.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끌어야지 자꾸 우리가 ‘이거 어차피 체결해야 되니까 저쪽 말 좀 들어 주자.’ 그리고 따라가지 마세요.

“뜻은 마찬가지로 아니냐?” 뜻만 마찬가지로 뭐든지 다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냥 그것은 다른 분들이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정상회담이 평가를 받고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 남북 관계 발전 법률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죄송합니다.

○**진영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실 것 있으면 좀 이따 말씀하시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영 위원** 예, 그래서 첫째는 이 법에도 다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 원칙에 맞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뒷부분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이게 다 돼 있어요. 그게 2조(기본원칙)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려면 뒷부분이 중요해요.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는 정치인으로서 행동하지 마시고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행동하셔야 돼요. 1차 남북 정상회담도 총선 바로 며칠 전에 발표를 해 가지고 이게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훼손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말자 이런 부분을 장관께서는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정상회담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려면 미리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의제가 설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지만 갖다 줄 보따리(주로 선물 보따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주겠다 말이지, 줄 수 있는 것은. 국민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해서 논의를 해야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다 결정해 놓고 국민이 합의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사후에 비준 동의받는 것하고 똑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진영 위원** 정부 내에서 논의한 것이라도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가 지금 아직 정상회담 때문에 일종의 보상적인 것으로 북측에 무엇을 한다든가 그런 논의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까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큰 기조 아래 남북 간의 경제협력, 남북 간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어떤 투자 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남북 간의 기여라는 것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지 정상회담이 특별히 갖는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은 정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임기 동안에 그동안 수차례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북측에 제의를 했고 이번에 북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때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저희로서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말 국익에 우선하는 의미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내용을 얘기해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내용을. 우리가 가서 줄 정도는 이미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다든지.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 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가 없고요, 이제 남북 간에 논의를 해서 의제는 설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정상 간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 위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2·13합의 조치와, 그러니까 6자회담과 남북회담은 약간 범위가 다를 수도 있지요? 6자회담의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 핵 폐기가 이제 주목적이 될 테니까.

그런데 6자회담 2·13합의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북한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핵, 기존 핵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2·13합의 조치에서 불분명합니다. 불능화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 궁극적인 비핵화는 기존 핵까지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3합의 조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물론 논의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13합의는 본래 9·19합의에 대한 이행을 위한 첫 단계와 둘째 단계의 합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19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가 6자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촉구하는 어떤 협의라고 할까 정상 간의 논의는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제는 6자회담이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이화영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여야 위원님들 공히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을 비롯한 남경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도 그와 같은 기조로 말씀하셔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려고요.

다만 오늘부터 보면 수구 언론들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흠집 내기를 본격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착잡한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얼핏 봐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기사가 있고, 동아일보 ‘60조 경험 위해 국방비 깎고 세금도 더 걷고’, 중앙일보도 ‘현찰 아닌 경험, 선불 아닌 후불 가능성’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가 흡사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폄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은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도 대대적인 원조가 있을 것이고 또 일본도 지원이 있을 것이고, 중국 러시아도 지원을 함께 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정부의 부담은 많이 줄어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 시기에 그와 같은 국제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이 발전하면 우리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아직까지는 확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이와 같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어떤 개방 또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편입이 가질 효과들, 평화적인 측면에서의 효과 또 우리 기업이 가질 수 있는 효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이나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아주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사실 남북 관계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없이 우리 경제의 발전이나 우리 사회, 문화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앞으로의 효과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발전에 관한 어떤 영향,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 연구검토를 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일제히 이런 기조를 갖고 있고, 당연한 것처럼 '뒷거래설 굳어져'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잡혀 나가는데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관님도 잘 하시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특히 금전적

뒷거래라든지 북쪽의 부당한 요청 이런 부분은 일체 배격하고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로소 남북 관계의 대화의 기본 틀이 제대로 정립되어진 이 중요한 회담에 대해서 자꾸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참여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추진해 오면서 남북 관계는 정말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해 왔고요, 여기에서 뒷거래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과정에서도 아주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2005년 12월에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남북 관계에 대한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우리가 정부와 또 국회와 국민 속에서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조만간 저희는 '남북 관계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하는,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투명한 절차와 함께 남북 관계를 보다 더 법률적 차원에서, 제도화된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 정상회담도 이런 틀 속에서 역시 한 단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수구 언론의 이와 같은 보도 태도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투명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 쪽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흠집 낼까 하는 방향을 잡다 보면 후불일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있을 경제협력의 내용까지도 미리 악의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컨대 앞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져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원조를 받게 되면 그것도 미국의 북한 퍼주기가 되어서 반미를 할 것인지, 이런 걱정이 사실 우리 수구 언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시장경제에 잘 적응해 나가고 북한이 개방하는 데 있어서 대

단히 중요한 시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쓰고 통일부도 필요한 적극적인, 매일 매일 브리핑을 해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아까 NLL 문제가 나왔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든지 금기시하지 말고 터놓고 대화를 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NLL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NLL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같은 것으로 굉장한 긴장이 서해안에서 늘 있지 않습니까? 서해교전 같은 것도 발생하고 심지어 총격전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도 NLL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해안을 남북한이 공존,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를테면 그 지역에 평화지역을 선포한다든가 그래서 남북한이 어로작업을 공동으로 같이 하는 존을 설정해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NLL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기해야지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국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노무현 대통령,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합의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의 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NLL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안보적 개념에서 이것이 설정이 되어서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 간에 어떻게 군사적 긴장 관계를 좀 더 줄이고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서해상에서 막아 나가느냐 하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은 서해상에 그런 안보상의 충돌을 막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장관님 회담

이라든지 경추위에서도 한강하구 개발 문제가 의제가 되었지만 사실은 북쪽의 여러 가지 사정 또 우리 쪽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본격 논의는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의제화하면서 NLL 문제도 함께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남북이 공생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통일부가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현재의 상태보다 훨씬 진전된 상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같은 문제인데,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북측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북측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같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남북한의 경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텐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와 같은 새로운 국면에서 취해져야 될 법적·제도적인 개선 내용은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대북 투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한반도경제공동체라는 말씀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북방경제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관점에서 경제가 곧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결국 이제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개발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북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들에게서 가장 최적의 투자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남북 간의 평화 정착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물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화영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이전에는 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우리 기업의 최적의 투자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느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북쪽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투자협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의 북쪽하고 접촉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다른 특별법을 만들든지 제도적인 보완이 있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폐에 관한 문제들이 지나친 정치적 논쟁을 우리 사회에 불러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우리 국내 기업인들이 대북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북측의 관계자를 접촉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이미 17대 국회 초반에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국민들에게 있어서 공론화도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상황과 변화를 놓고 본다면 정말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문제야말로 국회에서 정말 효율성 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화영 위원** 국가보안법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국회에서 정치적인 의사를 모아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 밖에 관련된 법안들, 예를 들어서 전면적인 경제협력과 특히 국제 간 협력구조가 만들어 질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법적·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저는 17대 국회 들어서 일관되게 남북 정상화

담의 필요성을 주창해 온 몇 안 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서 당연히 축하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북한은 체제 경쟁에 들어선 게 아니라 시간과의 경쟁에 쫓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나 그다음에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나 그다음에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나 그다음에 같은 체제를 지향하는 인근 국가들의 개혁·개방 정책, 그다음에 사회주의 왕조로서 제3세 승계 문제 등 모든 게 지금 북한 으로서는 시간과의 경쟁에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능동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 평화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15 공동성명을 내놓고도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 북한이 지적하듯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고, 그다음에 남북한 사이에는 군사 보장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적하는 지금 군사 보장 조치의 핵심은 하나는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고 하나는 NLL 문제지요. NLL 문제는 이미 학자들이 내놓은 절충안대로 해주하고 남포 간의 직항로를 인정해주고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으로 저는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으로. 북한도 그 정도면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인데 이게 오늘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출 것인가,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한미 갈등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 문제를 끌고 나와서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둘 다. 인정하자고 그럼시다.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 훈련에 대해서 저는 일부 연기나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선례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그토록 비판하던 전략적 유연성, 주한 미군의 존재가치, 주한 미군의 존재목적

자체가 대북한 전쟁 억지력에서 동북아 기동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보수 세력이 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미국만의 문제라고 동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보수 세력이 나서서 반대해야 될 주제인데. 그런데 이것이 남북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엄청나게 호재로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도 전략적 유연성의 인정,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둔을 허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당신들을 위한, 당신들만을 위한 그런 전쟁 억지력이 아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통권 환수합니다. 주한 미군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재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함께 우리 군의 상대적 자율성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을지연습이나 포커스렌즈에 대한 훈련 조정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군사력의 격차, 그리고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그것 그대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군비통제와 군사력 감축을 한 프로세스로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 훈련을 연계시킨다면 충분히 저는 일부 연기나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너무 경직되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훈련 한 번 안 한다고 나라 망하지 않아요. 봄에도 훈련 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그다음에 한미 갈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등이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주권국가인데. 우리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아닌 이상 당연한 갈등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는가가 도리어 동맹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장이나 확대 해석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미국이 북핵문제를 보는 시각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핵문제가 분단을 고착할 위험성이 있고, 핵전쟁에 따라 민족

을 공멸시킬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민족의 생존권 문제입니다마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고, 악의 축이나 불량국가를 다루는 문제이고, 세계적인 핵 도미노를 견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르지요,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북핵문제나 정전체제의 전환이나 평화협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틀 내에서 양자회담이나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2+2 회담이 지금 단계라면 북한과 미국이 앞선 2이고 한국과 중국이 뒤선 2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남북이 앞선 2가 되고 그다음 2가 중국과 미국이 이것을 보장해 주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북한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북·미 간의 정상이나 북핵문제나 안보문제는 북·미 관계이고 민간교류나 경제교류나 체육교류는 남북한의 문제이고, 이 틀을 깨뜨리지 못하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자율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해법이 있습니다, 학자들 의견을 죽 검토해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나 2·13합의 이행 의지에 대한 확고한 북한의 태도를 확인하자, 그리고 평화체제 이행 의지도 확인하고 명문화시켜 버리자, 이거지요.

다만 이행 절차, 이행 프로세스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남한 정부의 입장과 6자회담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미국 정부 입장이 충분히 절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갈등이라고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나 언론이 빠뜨리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일본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 저도 동의하지 않고 비판적인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조금 비판하는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본 정부에 손을 내밀어야 될 때고 일본 정부와 협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아베 내각의 정체성 문제

입니다. 다시 한번 북한 쪽에 이 문제에 대한 투명한 제2, 제3의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 6자회담이지, 5자회담입니다. 95만t 분담, 일본 정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면 150억 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지금 그런 전기,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납치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북·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150억 불, 100억 불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배상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미 관계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6자회담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위기에 빠진 아베 내각의 정체성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과 동시에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 문제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북한 쪽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혼란스러움, 지나친 갈등을 조장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혼란스러움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미국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국무성 초청 받아 가서 한반도 전문가 약 30~40명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 의회 권력의 변화로 미국의 국내 사정이 철저히 변했고 이제 부시 행정부의 대화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대단히 취약한 데 대해서 도리어 놀랐습니다. 대단히 취약합니다. 관망상태입니다, 지금.

뭘 관망하느냐? 과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핵 불능화에 대한 단계적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합의는 깨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일관되게 추구해 온 저조차도 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 6월 달 남북 정상회담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가장 심도 깊고 폭넓은 정보 교류가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의 단계를 회복시

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미 간에 핫라인을 가동해서라도 모든 의제, 모든 절차, 모든 과정, 북한과의 모든 협의 내용들을 철저히 미국과 나누고 또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이미 양자 문제를 떠나서 다자 문제가 돼 버린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럼으로써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폐되고, 북·일 관계 정상화가 되고, 개방화된 국제 경제 체제로 나오고, 그럼으로써 남북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최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추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성 위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인데 워낙 중요한 현안이고 또 오늘 중요한 질의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질의는 정확히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언론에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사안인데, 장관님께서 통의통위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를 통한 방문 원칙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육로 방문은 합의가 됐고,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에(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겁니다) 김 원장이 특사로 방북했을 때 육로를 통해서 방문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북측과 합의를 했다, 그래서 육로의 정치 경제적 의미는 크다, 그리고 이때 경의선을 통해서 개성까지 이동한 이후에 그다음에 승용차 혹은 기차로 가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는데, 일단 육로를 통한 방문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것은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어떻게 어떤 통로로 해서 가느냐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준비 접촉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육로로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가

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 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다음주 초에 열리게 될, 우리가 13일 날 요청했으니까 빠르면 월요일 날 협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게 될 겁니다.

가령 경호 문제도 있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무부서인 통일부장관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에 난 것도 그렇게 정확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이 북측의 전격 제안을 우리가 수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요청을 북이 수용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본래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차례 장소와 때와 의제에 관계없이 남북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여러 차례 했고요, 이런 의견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한 북측이 전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 측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정상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을 반드시 가진다는 합의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이에 대해서 북측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우리 특사에게 정상회담을 가지도록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최성 위원 우리의 제안을 북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전격 제안을 하고 우리가 다시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을 동시에 방문하는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실제 남북 간에 좀 협의가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최성 위원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나 남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정부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과제는 이미 장관급 회담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 과정에 있는 과제를 꼭 정상회

담에서 논의해야 될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일각에서는 정형근 의원이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달걀 세례를 받은 사례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의 안전 문제, 이게 제일 일차적인 요인이었다, 이런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 다시 평양에서 하는 실질적인 배경이 어떤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북측에서도 판단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양 정상 간에 모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평양이 아니냐 이렇게 북측에서 제의를 했고요,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평양에서 모이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오늘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부분 중에 한나라당에서 무려 20조라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깐 ‘뭐 그렇다더라’ 이렇게 되어 버리고, 또 100억 달러 미만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말고’ 혹은 그 이후에 뭔가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좀 심할 정도로 제기되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고 강도 높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거나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확산되어 버릴 경우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남북 관계에 교류·협력 비용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결국은 뒷거래라는 이런 징후들이 지금 많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초기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예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도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정부로서는 이제까지 지난 4년 반 동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전혀 뒷거래를 한다는 거 혹은 이면계약을 한다는 거 다른 어떤 부정한 방법들이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시고, 이미 국회에도 다 그런 보고가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법적 틀 속에서 남북 관계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제기하신

정치권의 이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단호하게 이런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고요, 절대로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에 대한 미국 통보 시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고, 또 실제 이번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 미국이 지지하고 또 실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보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결국 시간적인 통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 간에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 유효성,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남북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왔고요.

여러 통로로 그것을 서로 확인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몇 시에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교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은 한나라당이 발표했던 신대북 정책의 한반도 평화 비전 내용을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언론 보도로만 봤습니다.

○**최성 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한반도 평화 비전이란 이름의 한나라당의 신 대북 정책의 첫 번째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수용 검토입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협력에 가서는 300만 극빈 계층에 대한 연 15만t 쌀 무상 지원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정당이 정상회담이 합의되자마자 시기 장소 절차 모두 부적절하다, 그리고 과정 의제 목표 목적 비전도 석연치 않다, 이런 상황들이 진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통일부장관께서는 국회를 상대로 해야 되고, 원내 1당이고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의 한 그룹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가고 또 설명하고 또는 논박을 하시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주장하라고 하고 정부는 그냥 마이웨이만 하면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한나라당이 지금 제기한 이 정책이 한나라당의 공식 절차를 밟아서 당론으로 확정이 돼서 발표됐는지는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이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해서 발표하게 되면 정부로서의 입장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대단히 강도 높게 미 측에 항의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정상회담 때문에 일정하게 영향 받을 가능성 또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최성 위원** 앞서 김원기 국회의장님께서도 워낙 중요한 정상회담 국면에서 남북의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을 이야기 하였고, 또 제가 누누이 초당적인 국회 차원의 방문을 통해서 대선 4개월 앞둔 이런 상황에서 정략적 이용 논란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면서 실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해서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초당적 방북에 대해서 장관님과 정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재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재천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현안보고와 관련 통일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우리의 뜻은 배제된 강대국의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강대국 황포도 문제였지만 우리 민족이 이를 극복할 자주적 역량이 부족했었다는 자성도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의 운명을 더 이상 남에게만 맡기지 않겠다고 하는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보여 줄 계기가 되어야 하

고, 이런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우방이라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남북이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인식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등 6자회담의 진전을 가속화시켜 우방들의 신뢰와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는 슬기로운 성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진 위원, 최재천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9일자로 통일부차관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신언상 차관을 대신하여 이관세 차관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관세 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인사)

오늘 남북 정상회담 관련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다양한 고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셔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원기 위원과 우리 최성 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특별수행원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고 홍 길	권 영 길	권 영 세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원 웅	남 경 필	박 진
박 희 태	배 기 선	이 강 래	이 해 찬

이 화 영 임 중 석 진 영 최 성
최 재 천

○청가 위원(2인)

이 해 봉 정 몽 준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구 희 권
전 문 위 원	허 태 수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장	관	이 재 정
차	관	이 관 세
혁신재정기획본부장		조 용 남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7. 7. 19 황우여·정병국·이성구·신상진·박찬숙·김정권·오제세·박상돈·안상수·이영호·엄호성·송영선·이계경·장복심·이인기·정화원 의원 발의)

7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 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07. 7. 31 김성곤·조성태·김명자·김원웅·최성·서상기·엄호성·배기선·원혜영·문병호·이광철·김원기·윤원호·김영춘·이재창·김덕규·이석현·정두연·심재덕·이원영·신학용·이상경·김우남·이영호·문학진·정세균·장영달·김춘진·김진표·박찬석·홍재형·이용희·최규성·김재윤·신기남·오제세·장복심·조성래·홍미영·유승희·김태년·강혜숙·서혜석·양승조·김형주·오영식·박명광·김희선·선병렬·정동채·박기춘·박병석·김재홍·강성종·안민석·이경숙·김현미·김영주·이은영·이시중·김선미·강길부·김기춘·이상배·정갑윤·권경석·이계경·문희·백원우·이화영·안명옥·박계동·고조홍·진영·송영선·고홍길·정형근·정의화·최연희·이규택·이낙연·김낙성·박성범·김태홍·정장선·안영근·강창일·신국환·이근식·변재일·우윤근·김홍업·김송자·임종인·우원식·채수찬·박상돈·양형일·공성진·조일현·주승용·제종길·강기정·최재

천 · 김낙순 · 이종구 · 이성구 · 김부겸 · 유필
우 · 임종석 · 황진하 · 정문현 · 이해봉 · 나경
원 · 이계진 · 노현송 의원 발의)

8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